

# “비상진료 채용된 의사·간호사, 정부가 인건비 지원 한다”

###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재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 75개 의료기관 대상 의사 591명·간호사 878명 대상...종합병원도 검토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비상진료 신규인력으로 추가 채용한 의료진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

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한 신규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38개소, 공공의료기관 37개소 등 총 75

개소 의료기관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이다.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정부는 19일까지 기관별로 예산을 교부할 계획이다. 향후 지원 대상 확대에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 진료체계 운영 현황도 점검했다. 16일 기준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355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2.8%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보다 6.5% 증가한 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0

명으로 전주보다 2.2% 늘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93명으로 전주보다 1%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27개 중증·응급집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현장의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매일 중수본을 비공개로 개최하

고 있지만, 브리핑은 지난 9일부터 9일 연속 열리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 진료 체계 현황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한 요구사항,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한 국민의 지지 등을 호소해 왔다.

하지만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한덕수 총리가 사의 의사를 밝히자 복지부도 연일 브리핑을 취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입장을 밝힌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브리핑이 재개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이날도 브리핑은 진행되지 않았다. 서선욱기자



대낮 음주 단속하는 경찰. 행락철을 맞아 17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고산 입구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항소심 내달 시작

###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이른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7일 오후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증거조사 계획, 혐의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이 회장은 2015년 5월~9월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합병비율 1:0.35)을 위해 허위 합병 명분을 만들어 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허위 시너지 수치를 만들어낸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도 합병을 진행하기 위해 2015년 3월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중요 정보를 누락한 거짓 공시를 한 혐의, 2016년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재무제표에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 주식 재평가로 인해 자산을 과대 반영한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약 3년5개월 간 재판 끝에 1심은 지난 2월 이 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같은달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변용일기자

## ‘저수지 추락 아내 살해’ 숨진 무기수...재심서 현장 재검증

### 법률대리인 “직진만 해도 추락할 수 있다”...21년 만에 현장 재검증

보험금을 노린 차량 추락 사고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숨진 60대의 재심 재판에서 법원이 20여년 만에 다시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혐이 확정돼 복역 중 숨진 무기수 장모(66)씨의 재심과 관련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장씨는 2003년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당시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고의 추락하도록 해 조수석에 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의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당시 검찰·법원이 각기 검증한 사실 자체가 잘못됐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공소사실처럼 운전자가 왼쪽으로 운전대를 고의로 꺾지 않아도 차량이 추락했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도로 구조 상 차량이 그대

로 직진해도 저수지 추락 가능성이 있다”며 현장 검증을 요청했다.

또 “도로 지형 등이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동일하다. 해당 차량이 단종됐지만 제원이 가장 유사한 화물차를 현장 검증 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는 6월 3일 오후 추락 사고가 발생한 명금저수지 일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사건 직후 펼쳐진 검찰·법원의 현장검증에 이어 세 번째다.

당시 차량을 저수지에서 건져올린 해병대 전우회 회원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다음달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사건 직후 경찰은 장씨의 계획 살인 증거를 찾지 못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장씨가 가입한 다수의 보험상품 등을 근거로,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고의 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 발생 2년 뒤인 대법원에서 장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했다. 2009년과 2010년,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지난 2017년 충남지역 현직 경찰관이 재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장씨 측은 2021년 법원에 네 번째 재심을 청구했고, 이듬해 9월 법원이 수사 위법성을 인정하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에도 1년 넘게 검찰의 항고와 재항고가 이어졌고 올 1월 대법원에서 검찰의 재항고가 기각되면서 재심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날 중순 재심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장씨는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 이감 직후인 이날 2일 백혈병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 도중 숨졌다. 특히 사망 당일은 형 집행정지일이기도 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땅 문제로 다툰 형수 마구 때려 숨지게 한 70대, 징역 13년

별세한 형이 땅 문제로 다투다 형수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70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1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정오께 광주 관산

구 신촌동 한 단독 주택에서 자신의 형수인 80대 B씨와 다투던 중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뇌출혈 의심 진단을 받고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당시 숨진 친형이 남기고 간 토지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던 형수의 차폐 담벼락을 넘어 침입했다.

이후 말다툼 끝에 형수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가슴을 밟는 등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토지 문제로 형수와 갈등의 골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 ‘음식 섭취 후 아파’ 자영업자 상대 합의금 갈취

### 개인과실 있어도 합의금 요구

“일행들과 그곳에서 식사를 했는데 장염이 걸렸다. 어떻게 할거냐?”

강원도의 한 음식점에 전화를 건 A(39)씨의 말이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제가 직원이라서...”라고 말하자 A씨는 사장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사장은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라고 답하자 A씨는 기다렸다는 듯 치료비를 요구했다.

그렇게 사장이 A씨에게 송고한 돈은 200만원. A씨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인터넷으로 ‘맛집’을 검색해 하루에 10곳에서 많게는 20곳의 음식점에 이 같은 방법으로 자영업자들의 돈을 갈취했다.

A씨는 418차례에 걸쳐 모두 9000만원을 편취했다. 이렇게 반복된 그의 범행은 결국 경찰에 포리를 잡혔다.

사건 접수를 받은 경찰은 더 이상 피해 업소가 늘어나면 안된다고 생각, 1개팀을 투입해 A씨 검거에 온 힘을 쏟았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의 음식점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호통치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개인 부주의로 인해 음식이 상했음에도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가게의 이미지와 보전당국의 조사 등이 무서워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김제의 한 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최근 2명의 민원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한 민원인은 “김밥을 포장해서 집에 몇 시간 정도 있었는데 먹고 상해 배탈이 났다”며 “치료를 두번 받았으니 치료비를 내놓으라”고 했다.

이에 B씨는 “김밥은 상온에 보관하다보면 음식이 상할 수 있다”고 누차 설명했지만 민원인의 신고 협박에 못 이겨 결국 보험사에 연락해 36만원을 물어줬다.

이밖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또 다른 민원인은 합의금을 받은 뒤 곧바로 보전에 신고해 위생점검도 받아 경고조치를 받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B씨는 “보험사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런 사람이 많으니 그냥 물어주고 말자고 했다”면서 “이러한 악성 민원인들이 적지않게 많다. 자영업자들은 그저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최창용 법무법인 좋은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음식을 구입한 시점, 폐쇄회로(CC)TV 등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 영암 대불부두서 담장 들이받은 운전자 심정지

17일 오전 9시 31분께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부두 주변 도로에서 70대 A씨가 1t 화물차를 몰던 중 담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영암=조대호 기자